

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EU 대응 현황

KITA 브뤼셀지부 · KBA Europe

2025. 4. 10(목)

□ 미국의 대EU 관세 조치 및 영향

- (대EU 관세 조치) 상호관세, 자동차·부품 관세, 철강·알루미늄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

《미국의 대EU 관세 조치 및 영향》

관세 조치(발효일)	관세율	EU의 대미 수출액** (유로, 2024년)
상호관세* (4/9, 중국 외 90일 유예)	20%	2,900억
자동차·부품(4/3)	25%	670억
철강·알루미늄(3/12)	25%	260억

* 반도체, 의약품, 희토류, 목재, 구리 등 제외

** EU집행위 비공식 추산액

- (영향) 미국의 관세조치에 영향 받는 EU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3,800억 유로로 총 수출액의 70%에 해당
 - 미국은 EU산 수입제품에 약 800억 유로의 추가 관세 징수

□ EU의 보복 대응 및 유예

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EU 대응 현황

- ① (4/8) 미국의 철강·알루미늄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최종리스트 검토
- ② (4/9) EU집행위 무역기술장벽위원회, 보복 대응 승인 (회원국 중 헝가리만 반대)
- ③ (4/10)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방침에 **EU 보복 대응 90일 유예**

- (EU 보복 관세·유예) EU는 미국의 철강·알루미늄 관세조치에 맞서 **약 22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제품*에 최대 25%의 보복 관세 부과**(당초 4/15 개시 예정)를 승인했으나 **하루만에 90일 유예 결정**

* 대상품목(유로) : 대두(26억), 플라스틱(11억), 화장품(7.7억), 후사경(4.9억), 철강(4.9억), 페인팅(4.7억), 전기기계(4.7억), 폴리에틸렌(4.1억) 등

-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(4/9) 이후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위해 회원국간 긴급 논의를 통해 보복관세 유예 결정

- 보복 조치에 당초 미국산 버번위스키 등 주류에 대한 관세 부과도 포함되었으나 유럽산 와인에 대한 미국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제외
- (**추후 계획**) EU는 추후 미국과의 협상 불발 시 유예된 보복 조치를 재개한다는 입장

□ EU의 외교적 노력 현황

- (**대미 제안**)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-미국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 교역에 상호 무관세 적용을 제안(4/1)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거부
 - *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·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,3월에 연달아 미국을 방문하여 협상을 시도한 바 있음
 - 트럼프는 집행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하며 EU가 3,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할 것을 요구
- (**대중 협력·견제**) EU는 중국과 7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, 집행위원장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선결 과제로 중국에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요구
 - EU집행위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로 중국산 제품의 EU 역내 덤핑 가능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 위해 내부 TF 구성

□ EU의 내부 시장 보호 노력

- EU는 철강 세이프가드,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, 역외보조금 조치 등을 통해 글로벌 과잉생산된 제품의 역내 유입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

《EU 내부시장 보호 조치》

조치	내용
철강 세이프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4/1부터 역내 철강 수입 할당량을 최대 15% 감축 ▶ EU는 '18년부터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제품에 대해 일정 쿼터까지는 무관세, 초과물량은 25% 관세 부과 ▶ 현 세이프가드는 '26.6월 종료 예정이며, EU는 금년 3분기까지 대체 조치 마련 예정

조치	내용
반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EU 역외국 보조금을 활용해 인위적인 저가 가격으로 수입된 역외 제품으로부터 역내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추가 관세, 가격 약정 등을 조치 ▶ 중국산 EV에 대해 최대 35.3%의 반보조금을 '24.10월부터 부과
역외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EU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,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대해 역외보조금 등 재정적 기여 현황 심사·시정 조치 등 부과 ▶ 최근 집행위가 불가리아·루마니아 공공조달에 신청한 중국 회사들을 조사하자 신청 기업들이 입찰을 철회

- EU는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(DSA)*, 디지털 시장법(DMA)** 을 활용,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조치도 고려 중
 - * (디지털서비스법) 개인정보 유출, 불법 콘텐츠 양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권리 미 보장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%의 과징금 부과 가능
 - ** (디지털시장법) 디지털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% 과징금 부과, 반복 위반 시 20%까지 과징금 상향 가능
- EU는 메타와 애플에 대해 DSA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으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음